# “내년 성장률 2~3%서 버티도록 할 것”

## 李 대통령, 당청 회동서 “외환위기 급한 불 꺼”

## 경제난 극복 위한 ‘4대 경제정책 방향’ 제시도

## 박희태 대표, 대통령 보좌 ‘돌파형 내각’ 건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조찬 정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국제수지도 흑자를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흑자가 예상돼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표와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만약 내년 상반기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 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면서 “다만 현재 우리는 2~3%에서 버티도록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청년 리더 10만명 발굴을 통한 해외 보내기 사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0만명 직업 전환 교육 등을 언급했다.

◇**신빈곤층 대책 마련**=이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운 계층, 금융위기 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며 ‘신빈곤층’이라고 규정,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적어도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통분담 통한 일자리 나누기**=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 외에도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도록 유도, 그 여유분을 갖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액 연봉자의 연봉 중 1억원을 깎으면 100만원을 받는 사람 10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돌파내각’, ‘돌격내각’을 건의해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신화적 돌파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대통령을 보좌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내각의 행태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동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개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이 따르는, 그래서 난관을 돌파하는 돌파내각이 돼야 하고, 경제회복이라는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돌격내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현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개각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의원들, 자존심 버리고 역할 분담 성과”

### 한 이정현-민주 조영택 의원 ‘해결사 역’ 톡톡

**■광주·전남 예산 확보 뒷얘기**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성적은 ‘아쉽지만 꽤 알차다’가 일반적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지역 출신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노력하는 등 역할 분담을 잘 해낸 덕이라는 평가다.

조 의원 등은 15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에서 우선 열심히 뛰었고 해당 지역 의원들도 자존심을 버리고 물밑으로 노력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우선 두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투자진흥지구 조성 부지 매입비, 문화복합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기본계획비 등에 33억원이 증액된 것을 상당한 성과로 평했다. 정부와 다수의 예결위원이 반대했지만 두 의원의 협조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남대 의대 의생명과융합센터 신축(60억원), 전남대 사회과학대 증축(15억원), 광주과기원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 건립(20억원),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운영(5억원) 등은 각 항목을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으로 분류, 반영되도록 압력을 가했다.

광주 U대회 유치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에 없던 상황에서 3억, 9억, 13억으로 수시로 변경되다가 마침내 지난번 수준인 18억을 확보했다. 두 의원은 “돈 몇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야만 유치의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현경-해제 4차선 확장 공사비 7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데는 비록 무소속이었지만 예결위원이었던 이윤석 의원의 뚝심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락돼 아쉬운 부문은 엑스포 타운 건설과 관련 주택공사의 손해 보전 부족분 408억원,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30억원, 광주 태양광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20억원 등. 모두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우윤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5일 시·군을 통합하고 도(道)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통합시, 특별자치시(제주도)로 구분하고, 시·군은 생활권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통폐합, 통합시로 개편하는 대신 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행정구의 장과 광역시·도 행정구·군의 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 구는 5개 이내, 전국의 시·군은 70개 이내로 통합된다”며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해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회 지경위 의원들 오늘 광주·전남 방문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 을) 의원은 16일 정장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이 광주·전남을 시찰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불산업단지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선박블록 공장 등 산업 현장을 둘러본 뒤 광주의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산업과 관련된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시찰은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운영에 불참,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연합뉴스

# 예산처리 후폭풍…국회 파행

## 민주 “상임위 불참 등 국회 보이콧”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15일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운영에 불참,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파행 운영됐다.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통상통일위 협의도 민주당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 개최가 일단 무산되게 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집행제도 공청회’는 야당의원들의 참여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한나라당은 일단 23일을 경제살리기 입법안을 포함한 ‘MB개혁법안’ 처리의 1차 목표 시한으로 잡고 야당과의 물밑 접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회기 중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전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또다시 국회를 떼법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면 이는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연말까지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 광주시 2차추경 업무추진비 1억 5천만원 편성 논란

‘하루에 1천만원꼴, 12일동안 1억5천만원을 쓰겠다는데….’

광주시가 올해 말까지 보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5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2년 전인 지난 2006년 12월 15일 열린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치 않다”면서 당시 올라온 예산 1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15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2008년 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체육지원과에 5천만원, 총무과 4천만원, 관광진흥과 3천만원, 마케팅지원과·정책기획관실 등 2개 과에 각 1천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판공비)가 새로 편성됐다.

지방재정법(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해로 예산을 이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안이 반영돼 소화해야 하는 시기는 기껏해야 12일.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는 날(19일) 이후로 하루에 1천만원꼴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조차 ‘주요 현안 업무추진’, ‘지역현안사업 추진’등 구체적이지 않고 어디에 쓰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의회 예결위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2009년 예산안 심사때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데다 2년 전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던 예결위원들 가운데 위원장인 유재신(민주·광산 2)의원을 비롯, 조광향(민주·비례), 이정남(민주·광산 3) 의원 등이 그대로 속해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또 그대로 통과될 경우 2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중 잣대’,‘집행부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